

文, 트럼프 메시지 공개 “김정은 바라는 바 이뤄줄 것”

文 대통령, 뉴질랜드行 전용기서 공개

김 위원장 연내 답방 가능성 있어
답방, 비핵화에 긍정적인 모멘텀
연내 답방여부 김정은 결단에 달려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아주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김 위원장을 좋아하고, 그런만큼 김 위원장과 함께 남은 (비핵화 등)합의를 마저 이행하기를 바라고 또 김 위원장이 바라는 바를 이루어주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뉴질랜드로 향하면서 전용기인 공군1호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겐 전해달라고 한 메시지를 언론에 공개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은 그냥 가능성이 열려있다”며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북미간 비핵화 대화에서도 아주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 점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인식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다.



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뉴질랜드로 향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공군 1호기 기내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특히 북미간 2차 정상회담이나 이를 위한 전초적 성격인 고위급회담에 앞서 김 위원장이 서울을 답방하는 것에 대한 부담도 이번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말끔히 사라졌다”고 소개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연내 답방할지는 김 위원장의 결단에 달려 있는 문제로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자”면서 “김 위원장이 연내 답방을 할지 여부는 아직 알수는 없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에 대해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이 70년 만에 이뤄진 엄청난 역사적 큰 사변이듯 북한 지도자가 (1차 남북정상회담 당시)판문점에서 남쪽으로 넘어온 적은 있지만 서울을 방문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면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이뤄지면 그 자체로서 세계에 보내는 평화 메시지, 비핵화에 대한 의지,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의지 등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본

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현실화될 경우 이를 놓고 보수와 진보가 대립하는 등 국론 분열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 “국론 분열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그것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가 이뤄지고, 남북 간에 평화가 이뤄진다면 그것이야말로 모든 국민이 바라는 바다. 모든 국민들이 쌍수로 환영해 줄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시 경호 등을 위해 초래될 불편에 대해선 국민들께 양해도 구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해 북한에서 가장 신경을 쓸 부분이 경호라든지 안전 문제가 아닐까 한다”면서 “우리가 철저히 보장해야하고 경호나 안전 보장시 교통 등 국민들이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조금 양해해 주셔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2월께로 적시한 2차 북미정상회담이 올해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정상회담보다 진일보한 합의를 이끌어내야한다는 것에는 한미

정상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합의에선 북한 비핵화,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적대관계 청산, 북한 안전 보장 등을 북미가 합의했다”면서 “각각 조치들이 선후적으로 어떻게 배치돼 나갈 것인지 타임테이블은 북미간 대화를 통해 결정돼야하는데 싱가포르회담에서 원칙적 합의만 했기 때문에 2차 북미정상회담에선 조금더 큰 타임테이블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한미간 같은 인식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은 기내에서 40분 가량 간담회를 하면서 경제 등 각종 국내 현안에 대해서도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답하지 않았다.

모두 발언에서 “국내 문제는 질문받지 않겠다”고 강조한 문 대통령은 한 기자가 “소프트하게 여쭙겠다”며 “정부 3년차에 꼭 성과를 내고 싶은 분야가 무엇인지”를 묻자 “더 말씀 안하셔도 될 것 같다. 외교 문제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다”며 답을 피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판·검사 ‘성비위·음주운전’에도 경징계

제 식구 감싸기 논란... 외부인사 도입 시급

(법관징계위)

성매매·지하철 몰카 등 ‘감봉’ 처분
뇌물 등 수수 땀 정직 등 징계 무거워

판·검사가 성비위·음주운전을 저질러도 대부분 경징계에 그쳐 사법·수사기관 불신을 자초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대법원에 따르면, 2013년 1월~2018년 10월 법관 징계는 13건이었다. 이 가운데 성 문제 관련 징계는 성매매를 포함해 4건이었다. 이에 대한 처분은 감봉 3건에 정직 1건이었다.

의정부지방법원 심도 부장판사는 2016년 10월 품위유지 의무위반(성매매)으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이 분석한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심 부장판사는 같은해 8월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여성과 성교하고도 감봉 처분에 그쳤다.

서울동부지법 홍도 판사는 지난해 7월 지하철 전동차에서 여성의 신체를 3회 촬영했다. 그에 대한 처분은 감봉 4개월이었다.

서울북부지법 김도 판사는 지난해 6월 회식 자리에서 공판에 관여한 검사의 외모를 언급하고 회식 이후 두 팔로 해당 검사를 끌어안는 등 성추행으로 정직 1개월을 처분 받았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견책, 감봉, 정직으로 나뉜다. 견책은 직무에 종사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케 하는 처분이다. 감봉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 기간 중 봉급의 1/3 이하를 줄인다. 정직은 3개월 이상 1년 이하 기간 중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해당 기간 봉급을 지급하지 않는다.

◆ ‘제식구’로 구성되는 법관징계위

법관징계위원회는 법관으로만 구성된다. 위원회는 대법원장인 위원장, 위원 6명과 예비위원 4명을 둔다. 징계 혐의자는 심의기일에 출석해 서면이나 구술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며 증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서울 법원종합청사. /이범중 기자

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변호사나 학식, 경험 있는 사람을 특별변호인으로 선임해 보충진술과 증거제출도 할 수 있다. 징계 의결은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법관은 헌법에 의해 신분이 보장된다. 헌법 106조에 따르면,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으면 파면되지 않는다. 반면 검사징계법에는 해임과 면직도 징계에 포함돼 있다. 검사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3명이 변호사와 법학교수 등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외부인사다.

검찰은 전반적으로 법원보다 징계 수위가 높았지만, 감봉과 정직에 그친 처분도 많았다. 법무부에 따르면 2008년~2018년 8월 성추행으로 인한 징계는 11건이었다. 이 가운데 견책은 3건, 감봉이 3건, 면직 3건, 정직 1건, 해임 1건이었다. 현행 공무원 징계령을 기준으로 경징계에 속하는 감봉과 견책이 성추행에 따른 징계 중 절반을 차지한다.

다만 뇌물수수 and 금품수수에 대한 징계는 법원에 비해 무거웠다. 2013년 서울고검과 목포지청에서 벌어진 뇌물수수 2건에는 예외없이 해임 처분이 결정됐다. 관보에 따르면, 목포지청 전모 검사는 2012년 11월께 자신이 수사중인 피의자와 수차례 성관계(뇌물수수)해 이듬해 2월 해임됐다. 같은날 해임된 서울고검 김도 검사는 2008년부터 수차례 뇌물로 8억 8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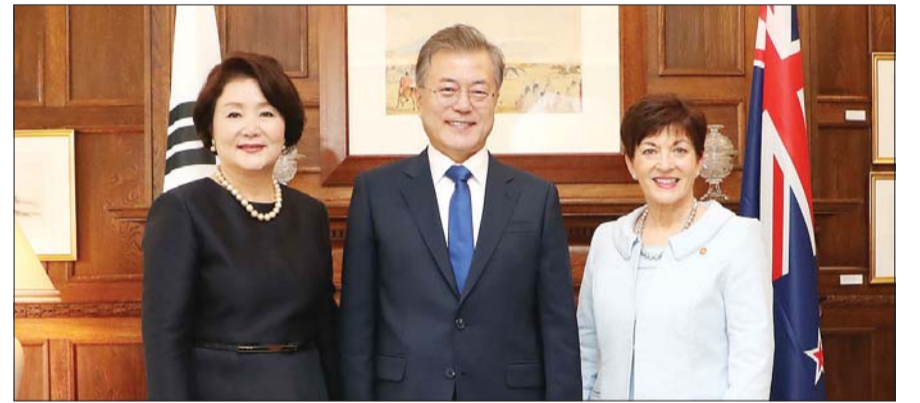
금품수수로 인한 징계 역시 9건 중 절반이 해임(3건)과 면직(2건)이었다. 이 밖에 정직(6개월) 2건, 감봉(3개월) 1건, 견책 1건이었다.

반면 법관의 금품수수에는 정직 1년 처분이 내려졌다. 김수천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2015년 2월 정은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레인지로버 차량 1대와 취득세와 보험료를 포함해 1억5624만 4300원을 수수하고, 같은해 10월 1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정직 1년 처분을 받았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그는 1심에서 징역 7년에 추징금 1억3124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 전 부장판사는 2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 받은 뒤 상고했다가 지난 5월 취하였다.

◆ 판검사 징계위 ‘진짜 외부인사’ 필요

윤창호법으로 경각심이 높아진 음주운전 관련 징계는 판검사 모두 약했다. 검찰은 음주운전에 대한 7건의 징계 중 5건이 감봉(1개월 3건, 2~3개월 각 1건)이었다. 나머지는 견책과 정직 1개월이었다. 법관의 뺑소니도 감봉 4개월에 그쳤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법관·검사 징계위원회 구성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대한변협 추천을 받은 재야 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나 한국법학교수회 추천 교수 등 객관적이고 권위 있는 제3의 단체에서 판검사 징계위 외부인사로 들어가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범중 기자 jaker@



뉴질랜드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3일 오후(현지시간) 뉴질랜드 오클랜드 총독 관저에서 팻시 레디 뉴질랜드 총독과 환담하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뉴질랜드서 진정어린 존중·배려 배워”

文 대통령, 뉴질랜드 국빈방문

“누구도 배제 없는 ‘포용국가’ 비전
양국 함께 포용정신 가꾸길 바래”

뉴질랜드를 국빈방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마오리 부족 속담을 인용하며 ‘사람이 먼저다’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오클랜드의 총독 관저에서 팻시 레디 뉴질랜드 총독과 오찬을 하며 오찬사를 통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 사람, 사람”이라는 마오리 부족 속담이 매우 인상적이라며 “나도 오래전부터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을 사용했는데, 서로 통하는 점이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세계 최초로 여성 참정권을 인정한 나라가 뉴질랜드로 뉴질랜드 여성들은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행복하고 조화롭게 사회를 이끌고 있다”며 “뉴질랜드는 원주민과 서로를 포용해 사회통합도 이루었다. 진정 어린 존중과 배려의 자세를 배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도 포용국가를 비전으로 삼아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고자 한다”며 “뉴질랜드와 한국의 아름다운 우정으로 양국이 함께 포용 정신을 가꾸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뉴질랜드 방문은 2014년 새해를 맞아 ‘오지 트레킹’을 하기위해 들렀을 때 이어 4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때를 떠올리면서 “4년 전 우리 부부는 뉴질랜드에서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는데 아름다운 자연과 삶을 다시 만나게 돼 아주 반갑고 기쁘다”고 전했다.

레디 총독은 “양국은 활발한 민주주의, 시장경제와 함께 법치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지지한다는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며 “전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오늘날 한국과 같은 핵심파트너와 공통의 가치와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레디 총독은 특히 “대통령께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 기울이고 계신 노력을 평가한다”며 “아직 긴 여정이 남아있지만 이미 좋은 출발을 이루셨다”고 말했다.

오찬에 앞서 문 대통령은 총독 관저 내 소정원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 참석했다. 관저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영접을 나온 그레고리 보른 뉴질랜드 총독 비서관과 악수하며 코를 부드럽게 맞대는 마오리 전통방식인 ‘홍이’로 인사했다. ‘홍이’는 주최 측 인사와 손님이 영혼을 교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전통 복장을 한 마오리족이 창을 휘두르며 환영 인사를 하자 문 대통령은 미소를 지으며 이를 바라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관저에 입장해 방명록에 ‘뉴질랜드와 한국의 우정이 깊고 흰 구름처럼 아름답게 이어질 것입니다’라고 적었다. /김승호 기자